

元 “韓, 중대범죄 의혹” vs 韓 “네거티브 공세 대응 최소화”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元 “韓, 여론조성·댓글팀 운영 의혹 사법리스크로 당대표 수행 어려워”
韓 “전대 혼탁 막고 화합 이끌 것”
나, 元·韓 비판하며 “尹 지키겠다”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반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거친 야유를 보냈다.

원희룡 후보는 주최측 추산 3000명이 운집한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행위”라며 “드루킹 사건을 떠 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당장 한동훈특검 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저는 이 특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며 의문을 품었다.

원 후보는 “저는 특검을 막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여러분께 당을 돌려드리겠다”며 “상향식 공천, 반드시 하겠다. 밀실공천, 듣보잡 공천, 사천,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 후보의 사전 의혹을 언급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며 “저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고 일반 당원들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같이 걱정한다”고 했다.

지지율이 약세인 상황에서 다른 후보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다시 한번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 야당의 탄핵 음모에 대통령을 결국 던져넣는 것을 막는 정도는 세 후보가 (입장이) 똑같아서 필요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의 연설은 원희룡 후보 다음 차례였다. 한동훈 후보가 발언을 이어가자 1층 관객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관객이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났다.

연설을 이어가던 한 후보는 이를 보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

이라며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며 관중에게 요청할 정도였다.

한 후보는 원 후보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저는 근거없는 막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부당한 싸움을 모두 이겨내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도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것이 잘못인가”라며 “자발적인 지지의사를 펼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돈을 주고 고용했다거나 팀을 운영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한 후보의 연설 중 발생한 관객 소요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니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이견을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줄이고 정답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나머지 주자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후보들의) 자유”라며 “어떤 정치 공학이나 정치 기술이 민심과 관심의 흐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국정농단 당무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의 씨운 단어다. 그 단어 스스로 없이 말해서 이제 명 민주당에 빌미 주는 후보 불안하지 않나”라며 한 후보에게 각을 세웠다.

또, “갑자기 나온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게 할 말 하겠나”라며 “저 나경원이 하겠다. 대통령 잘하는 거 꽉꽉 밀어드리고 잘못하는 거 쓴소리 꽉꽉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 지키겠다”며 원 후보도 비판했다.

/천안(충남)=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지지자 “단일화 해봤자” vs 元 지지자 “하면 좋겠다”

전대 선거인단 투표 D-3

2·3위 주자, 나경원·원희룡 후보 막판 변수 ‘단일화’ 놓고 신경전
나·윤 지지자 “단일화 안 했으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시작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2~3위 주자 나경원·원희룡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가 실시되며 문제로, 단일화는 선거 막판 유일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15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4인의 당 대표 후보자의 지지자들에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4인의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하는 열기



국민의힘이 15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주최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전 모습.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전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 전을 펼치고 있다.

를 붙여주던 한 지지자는 원 후보를 “국민의힘에 제일 적합한 후보”라고 표현했다. 단일화에 대해선 “향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진영 측에서 응원을 이끌고 있던 한 지지자는 윤 후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법조인들이지만, 윤 후보는 경제통”이라며 “유능한 당 대표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지자는 윤 후보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선 지지자들의 바람처럼 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2~3위 주자인 나 후보와 원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굳이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다. 득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득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으나, 지금까지의 여론 추세 등의 비춰 저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천안(충남)=박태홍 기자

추경호, 野 상설특검 검토에 “꼼수정치 점입가경”

비상대책위원회서 野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 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에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

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신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엔 상설특

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몇 4인을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애당 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

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며 “노벨 꼼수 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매년 민주당과 개발(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특검 추천권을 독

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법률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거 독일을 폐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식”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